

‘고무줄’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국가 상한선 도입

기후부, 개정안 내달 18일 시행
태양광 200m·풍력 1500m 이내
과도한 이격거리 조례 완화 의무

정부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고무줄처럼 적용되어 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선’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이격거리를 과도하게 넓혀 재생에너지 보급을 막던 걸림돌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3월 개정돼 내달 18일 시행을 앞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 **지자체마다 천차만별 이격거리…예측 가능성 높이고 입지 제약 해소**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중 129



곳이 조례로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등 지자체마다 편차가 매우 크고 과도한 규제가 적용돼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재생에너지 입지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보급 확대와 주민 수용성, 안전성을 종합 고려한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례로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정할 때 주거지역(주택 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 범위에서만 정할 수 있

며,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은 설정할 수 없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주택 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1500m 이내,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 범위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하한으로 뒀다.

반면,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에는 법률에 따라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사업 확산과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 **상한 초과 조례는 완화 의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법체계도 분리**

기후부는 이번 시행령이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를 막기 위한 ‘상한선’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지자체는 법 시행 전까지 기준 이내로 조례를 완화·개정해

야 한다. 예컨대 태양광 이격거리를 주거지역 300m로 규정한 A지자체는 200m 이내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만, 이미 100m로 규정한 B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법률 개정에 맞춰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각각 분리·정비된다.

이경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화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검체검사 업체, 12년간 낙찰자·물량 담합

녹십자·지씨셀·삼광·씨젠·이원 등
7개 대형 수탁·지휘 사업자 적발
공정위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혈액·조직 등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12년 이상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인 대형 검체검사 수탁기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심의에 올려졌다. 담합으로 영향받은 관련 입찰 규모는 3000억원 규모다.

공정위 사무처는 11일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 등에서 담합을 벌인 7개 사업자에게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정식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심인은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주식회사 지씨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주식회사 삼광랩트리 ▲재

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등 국내 주요 검체검사 수탁 및 수탁지원 사업자 7곳이다.

검체검사는 인체의 질병 감염 여부 등을 판정하기 위해 혈액·소변·체액 및 조직 등 다양한 검체를 대상으로 특정 물질을 검출하거나 이상 여부를 판독하는 행위다. 병원들은 원내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며, 국공립병원의 경우 2010년대 후반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사업자를 선정해 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7개 업체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2년 10개월 동안 국공립병원 등에서 발주한 총 706건의 검체검사 용역 입찰 등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물량을 나누어 먹는 식으로 조직적인 담합을 벌인 것

으로 파악됐다. 이번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거래 규모는 계약금액 기준 약 29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입찰담합(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제8호) 및 물량담합(제3호)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동일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 및 관련 임직원에게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날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개최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공항서부터 외국인 노동자 마약범죄 예방

산업인력공단·세관 맞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과의 협력하에 ‘외국인 노동자 입국 지원’ 강화에 나선다. 특히, 17개 송출국 노동자들 대상으로, 대한민국 입국 직후부터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를 공동으로 실시한다.

산업인력공단은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과 11일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한 입국 지원과 마약류 범죄 대응 및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마약 범죄로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세관 신고 절차, 통관 관련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통관 현안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인력공단은 그간 인천국제공항 내에 마련된 서비스센터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E-9)의 입국을 지원해 왔다.

이병훈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민국에 첫발을 내딛는 공항에서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산업인력공단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외국인력 도입 사업을 안전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폭염에 채솟값 비상… 배추·무 2만톤 쏟아

농식품부, 추석까지 채소 할인 지원

정부가 기록적 폭염에 따른 채소류 수급 불안정에 대비해, 배추와 무 비축물량 2만 톤(t)가량을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9월 하순 추석 때까지 한 달여 주요 채소 품목에 대한 할인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폭염이 지속될 경우 생육 지연 등으로 출하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7일 기준 배추 1포기 소매가는 평균 438원으로 1개월 전 대비 20.8% 올랐다. 같은 기간 청상추가 100g당 1165원에서 1651원으로 41.7% 올랐고, 시금치는 100g당 784원에서 1978원으로 무려 152% 급등했다. 오이 가격도 개당 762.3원에서 1078.8원으로 치솟았다.

농식품부는 고온 피해 예방 및 생육 관리에 필요한 약제·영양제와 멀칭필름, 차광도포제 등 농자재 지원을 예년보다 확대하고 있다.

이어 “여름철 기상악화 등에 따른 일시적 공급 부족에 대비해, 주요 수급관리 품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배추 상품이 쌓여 있다. /뉴시스

목인 배추·무의 경우 지난 7월 정부 수급물량(배추 1만5000t, 무 6000t)을 확보해 비축 중”이라며 “출하량 감소 시 도매시장, 가공업체 등 실수요처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채소류 전 품목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기까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정부 할인행사(최대 40%)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다만 8~9월 기간 수급 여건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주요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지방정부, 농촌진흥청, 농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과 생육관리협의체를 꾸렸다. 이를 통해 주요 산지 작황 및 가격 동향에 대한 상시 점검에 나섰다. /세종=김연세 기자

반도체 호황에 10대기업 수출 집중도 55%

데이터처, 2분기 수출액 2755억달러

반도체 호황기의 영향으로 지난 2분기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가 역대 최고를 찍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55.3%로 전년동분기에 비해 17.0%포인트(p) 올랐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비중이 가장 크다.

최근 10년간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0% 중후반대를 유지해 왔다. 이후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집중도는 지난해 2분기 38.3%, 3분기 40.6%, 4분기 43.4% 등을 거쳐 올해 1분기(50.1%) 50%대에 진입했다.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1년

전보다 10.0%p 뛴 76.3%로 나타났다.

수입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31.5%)는 전년 동분기 대비 2.4%p,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59.1%)는 4.5%p씩 올랐다.

올해 2분기 수출액은 2755억 달러로 전년동분기 대비 57.3% 증가했다. 수입액은 1889억 달러로 22.4% 늘었다. 수출액 증가폭은 대기업(81.8%)이 중소(13.1%)·중견기업(10.9%)에 비해 훨씬 컸다. 대기업은 소비재 수출이 감소했지만 IT부품, IT제품, 광산물 등 자본재·원자재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산업별로 광제조업 수출이 64.9% 늘었다. 전기전자(109.8%), 금속제품(37.8%), 석유화학(26.3%) 등의 증가폭이 컸다. 도소매업은 14.3%, 기타 산업은 0.1%씩 수출이 증가했다. 자본재 수출이 87.1% 늘었고, 광물성연료 등 원자재 수출도 25.2% 증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EIT 신임 원장에 이용필 전 대변인

〈산업부〉

이용필 전 산업통상부 대변인(사진)이 11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제6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이용필 신임 원장은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해 소재융합 산업정책관, 첨단산업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을 거치며 산업·기술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환경을 지적하며, 산업기술 R&D를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정의했다. 특히 정부의 Manufacturing AX(M.AX) 정책을 맞춰 제조기업의 AI 대전환을 적극 이끌고, 국가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